



Economy

코스피
2052.03
(-12.14)
↓
코스닥
657.80
(-10.92)
↓
금리
(국고체 3년)
1.42
(0.00)
→
환율
(원·달러)
1180.50
(-1.50)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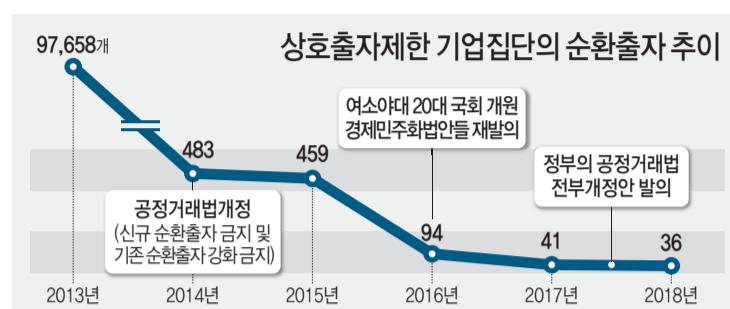
반·바 외 살 게 없다… 9년째 박스피

〈반도체〉 〈바이오〉

도돌이표 韓증시

〈上〉 문제는 경제 체질

한국증시가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한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증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일부에선 국내 주식 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을 담보 할 기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배구조·대북관계 개선
투자심리 회복 기대했지만
9년째 코스피 박스권 여전
취약한 산업구조, 증시 발복

지난해 한국증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한국의 주요 기업은 통 큰 배당정책을 약속했고, 지배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하지만 한국증시는 또다시 '도돌이표'다. '박스피(코스피지수의 박스권 지속)' 탈출을 기대했지만 돌고 돌아 제자리다.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한

2052.03에장을 마감했다. 5월 31일(2041.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1.63% 하락한 657.80포인트로장을 마감했다. 종가기준을 해 1월 3일의 657.02 이후 6개월 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3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다. 코스닥은 2015년 7월 21일 782.64포인트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때 코스닥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84만원의 원금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코스피 지수 2000 돌파 축포를 터뜨린 후 9년이 지난 현재 2000선을 지키는 것도 아슬아슬한 모습이다.

◆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홍콩C LSA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임기 말(2022년)에는 코스피가 4000까지 도달할 것이며 연간 15%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문재인정부의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였다. 배당 성향, 재무제표의 효율성, 기업 지배구조가 해결되면 한국 기업 저평가를 뜯 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분석에서도.

우선 레벨 측면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낮지만 지난해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34.88%로 전년(33.81%)보다 올라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기업은 2013년 9만7658개 기업에 달했지만 지난 2018년 연말 기준 36개 기업으로 크게 줄었다.

대북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면서 "세 국가 간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활용도 등을 떠나 남북 평화 무드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2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이글이글 끓는 서울 도심

서울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른 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日 추가규제 다음 타깃은 웨이퍼·탄소섬유

韓 '화이트 국가' 제외 언급
공작기계 등 규제확대 의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세가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일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탄소섬유, 공작기계 등 주요 산업 분야다.

일부 업계는 추가 규제에 불

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지만, 대부분은 대안 마련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 한 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규제강화 대상을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이다. 일본 정

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총 27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디스플레이와 웨이퍼 실리콘 업계는 일본의존도가 높아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디스플레이 소재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 규제가 확대될 경우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LG디스플레이 강인병

부사장은 "디스플레이에는 반도체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불산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불산은 일본 이외에 중국, 대만에도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고민이고, 재고를 정화해 대책을 잘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의 원료, 실리콘도 일본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김재웅·배한님 기자 ysw@

경희고 등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행정소송 등 혼란 예고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교 중 8교가 불합격 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해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서 "전날(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나머지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등 4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한용수 기자 hys@